

자문이 아니라 자치  
개발의 이익을 자연과 사회적약자에게 우선할 것  
성장 촉진에서 삶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 2018 수원시 문화예술 정책 제안

### ■ 제안 취지

- 반복과 회귀, 시행착오와 진전, 발전과 퇴보의 무수한 역사를 통하여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은 그 건강과 지속가능성의 본질이라는 것에 이의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지정하고 보호, 보존하려는 각고의 노력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생존과 궤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 인간에 있어 그 생존의 가치는 물질과 물리적인 것을 포함하여 마음과 정신의 건강과 자유가 사람다운 생활을 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중요한 의미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도시 공동체 또한 그러하다.
-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도시, 대중매체의 홍수와 자기소외를 동시에 겪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현대인들에게 다양성 무엇일까? 지역 속에서 세계의 정보바다를 동시에 살아가야하는 우리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해 가는 요즘에 있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 문화예술의 그 자유로움으로 사고(思考)와 활동 영역을 갱신(更新)하며 개인과 사회를 정화(淨化)하고, 책임감 있는 독창적 창작으로 존재의 삶의 의미와 공공의 사회가치관을 승화하고 견인하며, 그 예술적 직관으로 시대철학을 예시(豫示)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행복성취를 이루게 하는 동시대의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수원에서 오랫동안 문화예술활동을 하며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아온 바  
 수원시가 다양성을 가지고 건강한 도시생명체로 살기를 바라며  
 수원에서 수원시민으로서의 다양성과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수원시민 행복창조의 바탕이 되며  
 수원시의 중요 수입원이 될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과 융복합을 포함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정책을 민선7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제안 합니다.

### ■ 제안 내용

- 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시민과 행정당국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제도 구축

- ② 문화예술 예산 3% 확보  
문화복지 시대, 문화예술예산 3%는 시대적 요구이다. OECD 국가평균 3%이며 문화선진국들은 이미 4~5%까지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③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거버넌스 제도 확립  
문화예술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④ 문화자치 시대에 걸맞는 문화예술조례 제정 및 개정  
문화예술 정의,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 복지, 문화향유권, 문화재단 공간지원 등에 관련된 조례개정 및 제정
- ⑤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수원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보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생활예술 동아리 현황조사를 통한 생활예술동아리 지원 및 육성
- ⑥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확대  
연습 및 창작 공간 지원 확대, 공연 및 창작지원금 확대
- ⑦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립미술관, 대안공간, 소극장, 공동창작공간, 비영리 문화예술공간 등 지원 시스템구축
- ⑧ 시민들의 문화예술 정보접근성 확대  
문화예술정보 나눔 시스템 구성 및 운영
- ⑨ 수원예술인회관 건립  
예술가들이 모여 함께 창작하고 수원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야기할 공간마련
- ⑩ 문화예술 관련 분야 예산 집행의 현실화  
문화예술단체 경상비 지원, 기획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인력비 인정

 제안자

수원문화원

수원예총 - 전애리회장, 조형기 수석 부회장, 주용수 부회장, 장정희 부회장

나정희 부회장, 신호 감사, 김혜진 감사, 원유종 사무국장

신동렬 (사)한국음악협회 수원시지부장, 이영길 미술협회 지부장 정연수 사진작가협회 지부

장, 박병두 문인협회 지부장, 이평주 연예예술인협회지부장, 김모경 연극협회 지부장

수원민예총 - 이오연 지부장, 박설희 부지부장, 이해균 시각예술매체 위원장

김순애 시조창 위원회위원장, 정중진 음악위원회위원장

조은아 풍물위원회위원장, 이진희 사무국장

- 김미영 - 문화예술기획자
- 김정안 - 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 작가대표
- 이득현 -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 이상달 - 전업작가
- 이성호 - 경기민예총 이사장
- 이윤숙 - 대안공간 '눈' 대표

2

노동 <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 영역 확대

■ 제안 취지

■ 제안자: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일하는2030, 공공연대노동조합수원지회,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수원지역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시간당 9,000원을 책정
- 작년의 7,910원보다 13.7% 오른 금액으로서,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81,000원인데 이는 전년보다 227,810원이 증가한 것임
-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600여명임
- 경기도 8,900원, 안산시 9,080원, 성남시 9,000원, 화성시 9,390원
- 반면 기간제 및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사실상 '해고 없는 고용' 수준에서 머무르며 생활임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 3조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안 내용

- 수원시 공공부문의 직속 간접고용 노동자들 역시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아야 함

3

노동 <

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제안 취지

■ 제안자: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일하는2030, 공공연대노동조합수원지회,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수원지역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작년 연말 시점에 이미 수원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가 66명으로 드러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방향과도 맞지 않음
- 현재 수원시에서 구성중인 TF팀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에서 최소 1인 이상 참가해야 함

■ 제안 내용

- 수원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4

노동 <

수원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조례안 마련

■ 제안 취지

- 중앙정부의 감시감독 체계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증가하고 있음
-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환경(특히 노동3권)에서 지방 차원에서도 보호수단이 없다면 단기 저임금 노동시장은 청년·여성·이주민을 중심으로 인권유린의 화수분으로 전락할 것임
- 수원시의 후진적인 노동정책에서 그나마 지자체 수준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임

■ 제안자: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일하는2030, 공공연대노동조합수원지회,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수원지역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 내용

- 수원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조례안 마련

5

노동 <

수원시 특성화고등학생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조례

■ 제안 취지

■ 제안자: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일하는2030, 공공연대노동조합수원지회,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수원지역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으나 감시·감독 주체에 당사자인 특성화고등 학생이 빠져있음
- 정부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분석도 없이 사고 발생 때마다 자잘한 내용을 무수히 바꾸다 결국 폐지로 정책 방향을 돌림
- 수원시에 1개의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8개나 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7천여명의 학생들이 있음
- 수원시 내부의 학교가 진행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감독이 필요, 이에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수원지부등 학생 주체의 참여를 요구함
- 현재 운영중인 수원시 특성화고등학교 중 상당수가 비민주적 학사운영으로 굶아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재와 감시 역시 절실한 상황

■ 제안 내용

- 수원시 특성화고등학생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조례



6

## 자치 분권 < 시민의 선택으로 구청장, 동장을 임명

### ■ 제안 취지

- 현재의 지방선거(자치)제도 변화없이, 예산과 자치권이 확대된다면,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강화되는 꼴이다.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요구, 시민참여의 확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없다.
- 이미 수원시는 울산광역시 보다 인구가 많다. 단 한명의 선출직공무원인 시장이 관료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구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구청장과 동장 직위에 더 많은 개방직 공무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안자: 수원KYC (bodugy@gmail.com)

### ■ 현황 및 문제점

### ■ 제안 내용

- 마을회의(마을총회)에서 동장을 선택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시민들이 구청장을 선택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 도시 재생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

### ■ 제안 취지

-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임대주택 건설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보급정책은 대부분 수용하기 만만한 국.공유지나 그린벨트를 풀어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를 부추기는 정책은 인구에 비해 녹지가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불만과 겹쳐 오히려 지역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구도심에서 도시재생 사업과 병행해서 임대주택을 보급해야한다. 비교적 교통망 연결이 잘되어 있고, 사회적 기반시설이 가까운 구도심은 입주자들이 선택하기에도 유리하다.

■ 제안자: 수원KYC (bodugy@gmail.com)

### ■ 현황 및 문제점

### ■ 제안 내용

- 도시재생 사업지역 임대주택 확보

## 도시 재생, 청년 < 대학 1학년 모두를 수용할 만큼의 공공기숙사 확보

### ■ 제안 취지

- 현재 수준의 경기도와 수원시의 청년주거 대책(보급)은, 높은 임대료 탓에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 특히, 집을 떠난 새내기들의 불안과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1학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공공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공공기숙사가 확보되어야 보편적 서비스가 가능하다.

■ 제안자: 수원KYC (bodugy@gmail.com)

### ■ 현황 및 문제점

### ■ 제안 내용

- 수원지역내 1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공기숙사 확보

■ 제안 취지

-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났던 우리사회의 공공의료, 겨우 통계만 공유하는 수준의 수원의 공공의료 현실은 비참할 지경이었다.
- 각 구별 보건소만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는 전염병 혹은 재난에 대비한 독자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진료과목이 제한적이고, 병상수도 적고, 수원시민들은 장례식장으로만 자주 찾는 수준의 공공의료기관(경기의료원) 보다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의 보라매병원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 할 수 있고, 진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 제안자: 수원KYC (bodugy@gmail.com)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대비 공공의료기관 수와 병상수의 전국 평균은 각각 7.5%, 9.5%인데 비해, 수원지역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민간 대비 0.05%에 불과하고 병상수도 1.39%이다.

■ 제안 내용

- 국립의과대학이 운영하는 서수원시립병원 건립

민선7기 100대과제 선정위원회

## 여성분야 정책 과제

<b>I.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마련</b>
1. 시장 직속 성평등기구 설치
2. 수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3. 수원시 성평등 지표 개발
4. 수원시의회 직속 성평등기구 설치
<b>II.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b>
1. 고위직 공무원, 주요부서 공무원 여성 비율 50% 목표제 시행
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원장 여성비율 50% 목표제 시행
<b>III.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보장</b>
1.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마련
2.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여성인권조례 제정
3. 탈성매매 여성들의 주거지원 마련
4. '사각지대 10대여성'지원조례 제정
<b>III. 성차별·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수원 만들기</b>
1. 초·중·고등학교에 생리대 무상배치
2. 시내 공공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색출
3.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대중교통 내 방송 실시
<b>IV. 성평등 노동행정 실시</b>
1. 지자체 차원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로드맵 수립, 시행
2. 일·생활균형 정책 전담부서 설치
<b>V. 돌봄노동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b>
1. 돌봄노동의 양질의 일자리 전환 정책
2. 돌봄노동의 사회공공성 강화
3. 실효성 있는 맞춤형 자립지원책 마련
<b>VI. 한부모와 함께하는 수원시</b>
1. 한부모 통합상담서비스체계 구축
2.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3. 실효성 있는 맞춤형 자립지원책 마련

## I.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마련

### 1. 시장 직속 성평등 기구 설치

#### ■ 제안 취지

- 미투 운동의 확산은 권력구조를 바꿔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촛불 이후에도 여전한 성차별적 권력구조와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고 있는 일상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이다' 라는 구호처럼 수원시 또한 성평등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여 성평등한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여 성평등한 수원시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함.
-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를 마련하고자 시장직속 성평등 기구 설치를 제안함.

■ 제안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31-241-7530 이메일: swa1989@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수원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여성,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정책을 복지여성국 내 여성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성주류화 전략 관점의 '성평등 정책'이 아닌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복지, 돌봄에 국한되어 기획·실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여 기획·실행하는 전담부서 및 인력이 부재함.
- **관련근거: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 1항**

#### ■ 제안 내용

- 시장 직속의 성평등 기구를 설치하여 수원시 모든 부처의 정책을 성주류화 전략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여 수원시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기획·실행하여 성평등 실현에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함.
- 시장 직속 성평등 기구를 설치하여 부시장 중 1인이 담당하도록 함.
- 젠더전문가를 임용하여 성평등지표 관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시행, 성주류화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시의원, 공무원, 시산하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의무화하도록 함.
- 성평등(양성평등) 위원회, 성평등 노동위원회, 젠더폭력 위원회 모두를 성평등 기구에서 관할하여 운영하도록 함.
-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 1항의 개정과 함께 현재의 '복지여성국'을 복지와 여성국을 각각 분리하여 복지, 여성 관련 정책을 분리하여 실행하도록 함.

## I.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마련 2.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정

### ■ 제안 취지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묵인하고, 여·남 대결구도를 강화하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성주류화 전략과 젠더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함.

■ 제안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31-241-7530 이메일: swa1989@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2012년 제정된 '성평등 조례'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2015년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양성평등' 개념은 생물학적 성별(sex)을 기준으로 한 이분법적인 구분이며 여·남 대결적인 구도를 생성하여 젠더(gender) 간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함.
- 성별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 성주류화 목적을 실현시키고,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젠더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조례'로의 개정이 필요함.

### ■ 제안 내용

-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성주류화 전략과 젠더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바꾸어 성주류화 목적 실현을 위한 목적에 근거한 사업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I.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체계 마련

### 3. 수원시 성평등 지표 개발

#### ■ 제안 취지

- 수원시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

■ 제안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31-241-7530 이메일: swa1989@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수원시에는 성평등 지표가 존재하지 않음. 2014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수원시 여성 사회참여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sup>1)</sup> 정도가 진행되었을 뿐 성평등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폭력 등 몇 가지 분야에 한정되어 성별분리통계가 사용되고 있을 뿐 모든 분야에 성별분리통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 ■ 제안 내용

- 모든 분야에 통계에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성별분리통계를 근거로 노동, 정치 및 사회참여, 건강, 교육, 보육 등 전 영역에서의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여야 함.
-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수원시정연구원 차원의 성평등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1) 이영안, 「수원시 여성 사회참여 지표 기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4



## Ⅱ.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 4. 수원시의회 의장 직속 성평등기구 설치

#### ■ 제안 취지

- 수원시 시장직속 성평등기구 설치와 함께 의회 내 조례개정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및 의회 사무처의 성평등한 일터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직속기구 마련이 필요함.

■ 제안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31-241-7530 이메일: swa1989@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수원시의회는 행정의 부서 편제에 따라 5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체계로는 성평등한 수원시로 가기 위한 시정 전반 정책에 성인지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어려움. 의장 직속의 성평등기구의 설치에 지방의회가 수원시민의 성평등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속 기구가 마련되어야 함.
- 수원시 의원 및 의회 사무처의 일·가정 균형, 성평등한 일자리 만들기를 시의회부터 시작하여 시정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 내 성평등기구 설치가 필요함.

#### ■ 제안 내용

- 수원시의회 의장 직속 성평등기구 설치-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성인지정책 반영 및 의회 내 성평등한 분위기 형성
- 의회의장 산하 여·남 의원과 젠더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예산 및 정책을 성주류화 관점에서 검토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정책 및 예산을 성인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함. 또한 일상적으로 성평등 아젠다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함.
- 젠더전문가를 배치하여 의원 및 의회직원들의 성희롱 및 성차별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의원 및 의회직원들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세미나 제공, 가족 책임과 일치하는 회의시간 준수 등 성평등 의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여야 함.

14

## Ⅱ.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 1. 고위직 공무원, 주요부서 공무원 여성 비율 50% 목표제 시행

#### ■ 제안 취지

- 불균형한 성별 인력구조를 해소하고, 수원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

■ 제안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31-241-7530 이메일: swa1989@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 여성 공무원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4급 이상 남성 공무원 21명인 것에 비해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4명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일반직 4급과 5급 남성 공무원의 수가 164명인 것에 비해 여성 공무원의 수는 21명이며, 2급(1부시장, 2부시장)과 3급(기조실장, 도시정책실장, 의회사무처장) 남성 공무원이 5명인 것에 비해 여성 공무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sup>2)</sup>
- 수원시 주요부서 공무원 성별 현황<sup>3)</sup>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기획 부서 여성 비율 34.78%, 예산 부서 30%, 인사 부서 37.50%, 감사 부서 31.58%, 실·국 주무과 40.76%로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예산 부서는 2010년 여성 공무원 비율 60%에서 2014년 34.78%로 인사 부서는 2010년 42.86%에서 2014년 37.50%로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 ■ 제안 내용

- 고위급 공무원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공무원 진급시 가산점 부여로 적극적 조치 시행
- 수원시 주요 핵심부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을 40%이상 의무화

2) 「젠더적 관점에서 본 수원시-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장정희 수원시의원, 2018

3) 「수원시 여성 사회참여 지표 기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4

## II.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 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원장 여성 비율 50% 목표제 시행

#### ■ 제안 취지

- 지역 여성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 확대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

■ 제안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31-241-7530 이메일: swa1989@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을 나타낸 통계<sup>4)</sup>에 따르면 여성 위원 중 당연직 약 6%, 위촉직 약 37%로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음. 또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수원시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은 30.1%에 불과함.
- 지역 여성들의 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위원 비율을 40%이상 의무화하고, 위원장 성비를 맞추기 위한 여성 비율제 도입이 필요함.

#### ■ 제안 내용

- 수원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비율을 40%이상 의무화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계획 수립
- 위원장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4) 「수원시 여성 사회참여 지표 기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4

### Ⅲ.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보장

#### 1.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마련

##### ■ 제안 취지

- 데이트폭력피해 여성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집, 직장, 주변인, 자주 가는 곳들에 대해 노출이 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집 외에 활동반경 및 외부와의 접촉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데이트폭력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위협이나 협박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제도의 정책을 믿고 안전한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한 수원시만의 제도장치가 시급하다.

■ 제안자: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031-232-7780이메일: suwonhotline@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1,017명(전체 응답자 1,082명) 중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피해(통제/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폭력)를 경험한 여성은 61.6%(626명)에 달한다.
-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시민 대상 성의식 조사(2016)를 통해 여전히 수원시민은 안전에 있어서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 여성안심안전사업'운영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 위협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는 피해자 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발급 받은 경찰의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스마트워치)를 통한 경찰의 신변보호가 전부인 상태이다.
- 데이트폭력은 성·가정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한 상담과 의료적, 법적 지원체계 안에서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복합적인 폭력 중에 '성적 폭력'에 한해서만, 이도 성폭력으로 고소했거나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 이에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여성단체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의지를 가지고 수원시민을 위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 근거

- 경찰청 범죄통계 : 연도별 연인 간 폭력현황

연도별	계	상해	폭행	폭처법 위반	살인	강간 ·강제추행
2011	7,292	3,075	2,633	1,068	127	390
2012	7,584	3,028	2,822	1,226	99	409
2013	7,237,	2,571	2,848	1,179	106	533
2014	6,675	2,273	2,702	1,179	108	483
2015	7,692	2,306	3,670	1,105	102	509

**■ 제안 내용**

- 수원시는 수원시민 대상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수원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원시청 홈페이지 등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수원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수원시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적절한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과 전문상담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버스, 전철 등의 전광판과 관내 홍보 게시대에 플랭카드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알린다.

**■ 기대 효과**

-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여성이 안전한 수원친화도시 조성 할 수 있다.

### Ⅲ.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보장

#### 2.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여성인권조례 제정

##### ■ 제안 취지

- 한국사회의 성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진화의 과정은 매우 빠르다.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전근대적인 의식과 성별불평등한 현실은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영업 행위부터 스마트폰의 알선정보와 광고, 유인에 이르기까지 그 층위가 매우 다양하고 변화의 속도 또한 매우 빨라 정책이나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 수원역집결지는 전국에 존재하는 다른 집결지와 같이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다. 한국사회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수원역집결지를 존속 시키면서 암묵적으로 여성인권 침해를 용인해왔다. 이에 수원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인권'지원을 위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여성인권조례 제정' 마련을 해야 함.

■ 제안자: (사)수원여성의전화 (연락처: 031-232-7780 이메일: suwonhotline@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집결지를 폐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손쉽게 언급되는 풍선효과와 음성화된 성매매의 확장은 결코 현재 이곳의 성매매집결지의 존폐가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생존을 위한 기회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 부를 편취하고 여성들을 자신들의 쾌락을 생산하는 소유물로 취급하는 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성매매의 존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책임은 국가, 지자체, 시민 모두의 책임이다.
-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수원시가 타 지역보다 먼저 시행 될 줄 알았던 여성인권조례제정이 지연되면서 서울 청량리 등 집결지폐쇄 과정을 겪은 타 지역의 성매매알선업주들이 수원역집결지로 이동하면서 여성들에게 착취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원역집결지 부동산개발 이익과 맞물리면서 수원역집결지 폐쇄는 난항을 겪고 있다.
- 수원역집결지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던 수원시는 이에 책임성을 가지고 집결지 폐쇄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인권'에 초점을 중심에 두고 수원역집결지 폐쇄는 여성인권 없는 일방적 개발이나 단속만으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총체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 ■ 제안 내용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의 탈 성매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 필요.
-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을 전담 할 수 있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현장상담소 설치
-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민관협의체 구성

##### ■ 기대 효과

-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반인권적 성매매집결지의 역사를 반성하고 인간이 중심에 놓이는 살고 싶은 곳으로 변화하는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간 재탄생

### Ⅲ.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보장

#### 3. 탈성매매 여성들의 주거지원 마련

##### ■ 제안 취지

- 2017년 전국자활네트워크에 소속된 자활지원센터 8개소에서 이용경험이 있는 여성 600명을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탈성매매를 한 여성들의 대다수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알 수 있었다.
- 응답자 중 대부분의 여성들은 10대에 성매매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낮은 학력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당장의 생활비와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장기간 성매매노출로 인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치료회복과 동시에 임파워링 하는 동안 주거안정이 시급하다.

■ 제안자: (사)수원여성의전화 (연락처: 031-232-7780 이메일: suwonhotline@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탈성매매를 하는데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이들이 성매매로 발생한 피해는 상담소를 통해서 시급한 법률, 의료지원과 자활지원센터에 공동작업장에 나오면서 발생하는 시간당 6,470원인 참여비로는 주거문제를 감당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만나는 성매매경험을 가진 여성들은 그동안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배제당해 온 여성들이다.
- 성매매 여성은 빈곤, 개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없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여성들의 임파워먼트 과정으로의 자활(1년씩 연장하여 3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성매매를 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과 지원체계 속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 누리고 지키면서 새로운 삶에 도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 또한 자활 참여자들은 개인의 자원 유무와 상관없이 성매매경험으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동작업장에 참여하는 기간만이라도 비싼 월세를 내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수원시는 주거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 제안 내용

-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주거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임파워링 할 수 있도록 한다.

##### ■ 기대 효과

-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를 찾게 함으로서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Ⅲ.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보장

#### 4. '사각지대 10대여성'지원조례 제정

##### ■ 제안 취지

- 한국사회에서 십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은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이며, 십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학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인식이 지배한 사회에서는 성년이 아닌 자의 독립은 맥락의 이해보다는 '가출'로 이해된다.
- 가출로 인해서 성폭력·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출로 인한 질병과 임신 등 발병률이 높으며, 10대 여성상당수가 생계형 성매매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체계마련이 시급하다.

■ 제안자: (사)수원여성의전화 (연락처: 031-232-7780 이메일: suwonhotline@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십대(청소년)여성은 부모의 보호아래 가족과 사는 것이 정상 이데올로기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받으며 함께 살아야 한다. 하지만 가출한 십대 여성들을 상담을 해보면 '집'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차별, 사랑의 결핍, 지지의 부족,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결국 '집'을 떠나 밖으로 나온 십대여성들에게는 더 취약 할 수밖에 없다. 거리로 나온 십대여성들에게는 '가출 팸'등을 이루면서 집단으로 살거나 선배 집, 원룸, 고시원, pc방 등 전전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기본적인 생계조건, 노동의 조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 및 착취적 성매매와 성폭력의 위험에 쉽게 노출 될 수밖에 없다.
- 또한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미 가족과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해도 가출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며 장기화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이와 동향분석을 보면 성매매알선 강요의 피해자의 60%가 가출상태, 나머지 40%는 비가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청소년들의 가출과 성매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따라서 십대여성들이 보호대상이 아닌 주체적으로 삶이 영위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성폭력 등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출팸 및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조건 사기 등은 엄연한 범죄이며, 성적 착취가 성폭력에 해당함을 알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성매매 유입된 십대여성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원시 맞춤형 '사각지대 10대 여성'지원조례 제정

##### ■ 제안 내용

- 사이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성매매로 이어지는 채팅앱을 조사, 성매매 1차 유입방지
- 청소년 시각으로 바라본 유해 업소(변종 업소)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 지역 사회 주요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에 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상시적 비치

- 가출한 십대여성 대상 숙식제공 미끼 성매매알선자 수사전담 팀별도 설치
- 수원지역 내 가출한 십대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마련
-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원시 지역 내 24시간 비상식품 및 약품(생리대 및 비상약품) 제공 시설 마련
- 긴급주거지 제공

### Ⅲ. 성차별·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수원 만들기

#### 1. 초·중·고등학교에 생리대 무상배치

##### ■ 제안 취지

- 수원 여성 시민의 건강권 확보
- 생리대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생리대 무상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제안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31-241-7530 이메일: swa1989@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한 생리를 하며 취약계층 여성의 경우 생리대 비용 부담이 큼.
- 수원시의 경우 현재 신청을 한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 한해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생리대 무상 배치를 통해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생리대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함.

##### ■ 제안 내용

- 초·중·고·대학교 내 화장실에 생리대 무상 배치 실시
- 단계적으로 공공화장실에 생리대 무상배치로 확대하고, 생리대 무상화 절차 계획 수립하도록 함.

21

Ⅲ. 성차별·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수원 만들기  
2. 시내 공공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색출

**■ 제안 취지**  
·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제 아래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색출하여 안전한 화장실, 나아가 성차별·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도록 함.

**■ 제안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31-241-7530 이메일: swa1989@hanmail.net)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불법 촬영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불법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sup>5)</sup>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 및 유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중 하나임.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원시내 공공 화장실 역시 안전하지 않으며, 불법 촬영 카메라를 규제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며, 수원시 차원에서의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처와 체계 마련이 시급함.

- 제안 내용**
- 관련 예산 배정 및 불법 카메라 색출을 위한 방안 마련
  - 카메라 설치자 및 불법 촬영물 유포자 처벌 체계 마련

5) 사이버 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여,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다. (서울특별시·(사)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018)

### Ⅲ. 성차별·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수원 만들기

#### 3.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대중교통 내 방송 실시

##### ■ 제안 취지

-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 성평등 관련 방송을 실시하여 일상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기회를 제공함.

■ 제안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31-241-7530 이메일: swa1989@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회가 많지 않음.
- 성역할 고정관념, 강간 문화의 인식 등 다양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송을 기획하여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방송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성평등 인식 확산이 필요함.

##### ■ 제안 내용

-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방송 내용 기획
- 수원 시내 버스, 지하철에 매일 방송 실시

## IV. 성평등 노동행정 실시

### 1. 지자체 차원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로드맵 수립, 시행

#### ■ 제안 취지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임금격차로 극명하게 드러남.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개선에 있어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주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 지자체 차원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로드맵을 수립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함.

■ 제안자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031-246-2080 이메일: swwa@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OECE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17년간 성별임금격차 부문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있음. 2016년 기준 100:63.3으로 OECD 평균은 100:85.9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2위인 에스토니아 100:71.3 비해서도 8%p 가량 높음.
-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위한 국가차원의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로드맵도 필요함.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춘 지자체의 호응이 요구되는 사항임.

#### ■ 제안 내용

- 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 수립, 시행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민간기업 확산 계획 수립, 시행

## IV. 성평등 노동행정 실시

### 2. 일·생활균형 정책 전담부서 설치

#### ■ 제안 취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일·생활균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성평등, 돌봄의 공동책임은 중요함
- 수원시는 일·생활정책을 이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제안자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031-246-2080 이메일: swwa@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사회에서 '일·생활균형정책'을 말할 때 가족과 보내는 시간, 휴식, 가족 돌봄 등 포괄적인 면을 담기보다 출산과 육아에 한정되고 있음. 그리고 이 정책이 여성에게만 돌봄을 강요하고 성역할 구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음.
- 2016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8.5% 수준이며, 2015년 기준 49세 이하 초등자녀 이하 맞벌이 가구의 여성의 일일 자녀 돌봄 시간(4.3시간)은 남성의 3.3배, 여성의 가사참여 시간(2.9시간)은 남성의 4.8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제안 내용

- 일·생활균형 정책 전담부서 설치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일·생활균형 매뉴얼 제작 및 단계별 민간 확산 계획 수립
- 공공조달 선정 시 일·생활균형 기업 선정

25

## V. 돌봄노동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

### 1. 돌봄노동의 양질의 일자리 전환 정책

#### ■ 제안 취지

·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영역의 돌봄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났으며 또한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도 점차 확대되어 그러나 돌봄일자리는 여성의 질 낮은 일자리로 문제가 됨.

수원시가 돌봄노동 실태조사와 더불어 돌봄노동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제안함.

■ 제안자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031-246-2080 이메일: swwa@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영역의 돌봄일자리는 사회보험도 적용 안 되는 열악한 일자리로 그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비공식영역에 머물고 있음. 공공부문 돌봄 일자리도 역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로 질 낮은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음.
- 공공부문의 돌봄노동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이루어짐, 중앙정부가 정한 수가가 너무 낮은 문제도 있지만 그 운영과 세부예산은 지자체의 권한임.
- 현재 돌봄노동은 쪼개기로 시간제 노동을 늘려가고 있는 현실임.  
또한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들의 몰이해와 갑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 교육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 ■ 제안 내용

- 공공부문 돌봄노동 실태조사 및 양질의 일자리 전환정책 수립
-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 교육 추진체계 마련



## V. 돌봄노동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

### 2. 돌봄노동의 사회공공성 강화

#### ■ 제안 취지

-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공성 강화는 매우 중요함.
- 돌봄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는 여성의 일·생활균형을 이루는데도 주요 과제가 됨  
수원시는 어린이집, 노인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실버타운 등 돌봄 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돌봄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공공성 강화 매뉴얼을 마련하여 실현할 것을 제안함.

■ 제안자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031-246-2080 이메일: swwa@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집, 노인요양병원, 산후 조리원, 실버타운 등 지역에 다양한 돌봄시설이 있음
- 그러나 이용자에 대한 문제,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질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음.  
좋은 돌봄은 돌봄 노동자의 헌신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님.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체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해를 통한 상호 교감 등이 필요함.

#### ■ 제안 내용

- 돌봄 노동에 대한 공공성 강화 매뉴얼 제작 및 실현
- 돌봄 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 교육 추진체계 마련

## VI. 한부모 정책

### 1. 한부모 통합상담서비스체계 구축

#### ■ 제안 취지

- 한부모들의 지지망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양육환경마련

#### ■ 제안자 :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10-8757-3729 이메일: ggghanbumo@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적 어려움, 부모 역할 수행을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 자녀양육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임신 초, 중기 위기상담, 사각지대 임신부나, 출산을 앞둔 결혼 경력이 있는 한부모 상담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초기 미혼모나 이혼, 사별 한부모들에게 필요한 특화프로그램이 없어 한부모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적인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부모들은 생활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한부모 중 절반 이상이 혼자서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기관의 치료나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5.7%)으로 나타나 이들의 심리·정서적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한부모 실태조사)

#### ■ 제안 내용

-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 정서지원 및 역량강화, 자립을 한곳에서 상담하는 원스톱 상담센터 및 쉼터 설치
- 민간단체와 연계한 동료 간 상담체계 구축

## VI. 돌봄노동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

### 2.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 ■ 제안 취지

- 높은 이혼율과 더불어 저소득여성 가구주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적절한 주거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 제안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10-8757-3729 이메일:gghanbumo@hanmail.net )

#### ■ 현황 및 문제점

- 수년째 지속된 전세값 급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한부모가족은 주거문제로 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물량이 적어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반지하나 옥탑방, 낡은 다세대주택 등 어린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주거환경임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정책 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제공, 주거비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근거:**

#### ■ 제안 내용

-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세분화
- 행정절차의 간소화, 대기시간의 단축,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고, 공공주택의 생활편의성 및 근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함

## VI. 한부모와 함께하는 수원시

### 3. 실효성 있는 맞춤형 자립지원책 마련

**■ 제안 취지**

-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함.

**■ 제안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연락처: 010-8757-3729 이메일:gghanbumo@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취업한 한부모의 48.2%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지만, 월평균소득은 189.6만원 수준으로, 2014 전체 평균 가구가처분 소득의 48.7%에 불과하여 빈곤율은 심각함.
-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상황은 상용 근로자가 48.0%,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36.7%, 수준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취업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25.7%(「2014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인 것에 비해 한부모가족이 불안정한 고용에 놓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특히 여성가구주들은 접근이 쉬운 일용직이나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로 취업해 고용상 지위가 불안정함

**■ 제안 내용**

- 대상자에 따라 구체적인 상담과 교육, 신청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과 연계
- 포괄적인 맞춤형 자립 지원책 마련
  - 소득지원 한부모 상황 관리, 구직·육아·직업훈련과 취업 시 부가급여, 취업지원업무, 교육 훈련 생계비와 인턴비 지원 등 포함한 포괄적 상담 지원

### ■ 제안 취지

- 정조이래 농업생산과 기술의 중심이었던 수원은 195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와 탈농촌, 도시화의 전형적인 도시가 되었다. 도심형주거지역의 확대와 농지면적의 급속한 축소가 이루어졌고 농가인구 역시 급속히 줄어들어 시민의 먹거리 역시 절대적인 외부 의존형 도시가 되었다.
- 따라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가공 및 소비 역시 산업화된 시장경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로 국내외 대규모 농업먹거리자본의 생산과 유통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 1980년대 이래 국내 농업먹거리시장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먹거리를 통한 국민의 식량안보, 먹거리자주권확보, 먹거리안전성, 환경보호, 토지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적인 먹거리주권운동과 국가정책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 2010년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기간의 학교무상급식운동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실화되기 시작되었으며 현재 만4~5세부터 중학교 전 학년까지 무상의무급식이 실행되고 있으며 2018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급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무상급식운동은 지역의 먹거리가 친환경, 사회적 배려, 식생활교육으로 확장하고 유기농생산과 로컬푸드운동, 그리고 슬로우푸드운동으로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푸드플랜** 즉 지방자치단체(도시)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재활용까지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역먹거리 전략'을 채택하는 도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먹거리기본계획을 세우는 세계의 도시들이 지난 2015년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도시 먹거리정책 협약'을 맺고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먹거리정책을 펼치기로 합의하였다. 국내에서도 서울시와 전주 시, 그리고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역시 최근 푸드플랜 지역먹거리전략 기초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 ■ 제안자:

### ■ 현황 및 문제점

- 생산: 농지면적 축소와 소유주의 외지와, 임차농의 확대로 농업생산의 친환경전환이 어렵다. 지역농가의 생산농지확보 어려움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기회비용의 증가로 품종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 역시 확보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 유통: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외부 대규모 유통자본이 지역농업생산과 지역가공공장을 도외시키고 있으며 시장경쟁에 의해 지역농업생산, 로컬컴퍼니, 지역유통업체, 지역사회적경제가 도태되고 있는 현실이다.
- 소비: 현재 학교급식시장만 한해 1,000억이 넘는 먹거리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수원시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먹거리건강성, 먹거리선택권, 먹거리접근권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개인의 경제력, 개인의 정보력에 전가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은 어떤 생물학적 생산과정을 거쳐 어떤 영양성분과 첨가물, 어떠한 화학적 안전성이 보장되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먹거리위기를 당하는 시민의 경우, 기아상태에서 국가복지에 배제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시민은 굶거나 구걸하지 않으며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 재활용: 수원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세계의 생산되는 먹거리의 50% 버려지거나 사료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인구의 10억명 이상이 굶고 있다는 사실과 배치되고 있다. 수원시 역시 상당한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으며 유통기간이라는 법적인 문제와 안전성문제 등에 따라 버려지고 있거나 낭비되고 있다. 푸드뱅크가 운용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 ■ 제안 내용

-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전략 즉 **먹거리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세우고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건강먹거리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 먹거리기본계획을 이행하고 수행할 **"수원시 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한다.
- 먹거리기본계획(푸드플랜)과 통합먹거리지원센터는 **민관먹거리거버넌스**, 즉 가칭 **"수원시 먹거리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먹거리협치거버넌스는 수원시의 먹거리기본계획이 보다 지속가능한 철학과 지혜, 먹거리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적용될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이다.
- 올바른 음식,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강화를 위해 **시민식생활교육캠페인**을 전면화해야 한다.


■ 제안 취지

-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2016년 기준 수원시 총 1,020개소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설치현황 :
  - 사업별로 보면 주택지원사업 469개소로 약 46.0%, 건물지원사업 28.3% ,공공기관 9.9%, 학교 7% 로 나타남.
  - 에너지원별로 태양광이 928개소로 약 91.0%차지
- 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량의 43.1%, 학교 19.7%, 민간 발전사업 15.3%,주택 지원사업 12.4%.

■ 제안자: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의 전력 자립도는 2013년 약 21.0%로 가장 높았으나 열병합발전소의 발전량 저감으로 전력자립도는 하락하는 실정임. 폐기물 활용과 일부 화학연료 사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개념을 제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연에너지 중심의 '재생가능에너지'비중 확대에서 정책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설치 대비 발전량을 봤을 때 가장 설치량이 많은 주택에 비해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발전량이 많지만 공공기관은 2014년 37개 2016년 14개로 점차 감소되고 있고 학교는 2019년 18개에서 2016년 3개로 점차 감소되고 있음
- 설치량 대비 발전량이 주택은 1/4배, 공공시설과 학교는 4배임을 감안하여 주택의 재생에너지 설치를 권장함과 동시에 공공시설과 학교의 설치를 늘이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수원시 내에 재활용품을 분별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은 있으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거나 재생산 해내는 시설은 없는 현실이다.
- 수원시에서 사용한 쓰레기는 수원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됨

 제안 내용

-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30%로
  - (1) 수원시의 공공시설과 학교에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강화
  - (2)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에너지 자립 단지를 선정해서 수원시 모델제시
  
- 재활용공사 설립
  - 국가가 기본틀을 만들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 (1) 재활용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 설립
  - (2) 회수, 재사용까지 가능한 시설로



■ 제안 취지

- 수원시는 환경과 인체에 해를 덜 미치는 상품인 '녹색 제품' 구매 비율을 전체 구매의 40%까지 높일 것이며 녹색 제품 구매 확대, 활성화 교육 등 추진 계획을 발표한바가 있다.
- 이에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녹색제품의 안정성과 경제성, 윤리성, 효율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녹색소비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도시를 기대한다.

■ 제안자: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 내용

- 소비자·생산자 상생하는 녹색소비도시 수원
  - 제품 용기 100% 수거 및 재활용하는 착한기업을 선정하고 시는 그에 적절한 인센티브 지원을 정책화하여 지속적인 녹색제품 생산을 독려하고, 모니터를 통해 선정된 착한기업을 시청홈페이지에 알림으로써 녹색소비를 독려한다.
- 지속적인 녹색소비 시민교육도시 수원
  -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점차 녹색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대상 녹색소비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녹색소비 생활화를 독려한다.

**제안 취지**

· 수원시는 경기도 중심지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1980년 약 31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약 119만 명으로, 35년 사이 거의 4배 증가했다. 녹지 면적은 2006년 77,659,752㎡에서 2017년 18,396,899㎡로 10년 사이 약 1/4로 줄어들었다. 공원은 1개소 증가했으나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부터 총 45개소의 공원이 민간개발, 공원해제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제안자:**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 생물다양성 유지·보전 현황

① 수원시 녹지 현황(단위: 천㎡)

구분	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2011	<b>1,959</b>	1,565	354	40
2014	<b>1,183</b>	872	303	7

\* 자료: 수원시 고시2011-96호, 산림청(2014)전국 도시림 현황통계

• 개발제한구역(2013.1): 총 29.5km<sup>2</sup>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24.4%,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는 1,061명

② 수원시 농지 현황(단위: 천㎡)

구분	계	밭	논	과수원	농경지
2005	<b>28,440</b>	10,702	17,634	105	28,335
2010	<b>25,998</b>	10,012	15,885	101	25,897
2014	<b>23,137</b>	7,835	11,844	62	19,679

\* 자료: 수원시(2015) 2014 수원시 통계

③ 수원시 도시공원 현황(단위: 천㎡)

구분	총 개소	계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2011	<b>248</b>	<b>5,444</b>	479	7	4,898	1	59	-
2015	<b>249</b>	<b>7,437</b>	171	13	6,830	1	61	4

\* 자료: 수원시 통계연보2011, 수원시(2015)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 비교: 산림청 자료와 면적 상이(2014년 녹지 총계 1183)

#### ④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현황

- 2020년 실효대상 공원(총 10개소): 일월, 인계3호, 만석, 통소바위, 숙지, 조원, 영화, 영흥, 지시대, 슬쑹어린이공원
- 2020년 이후(총 35개소): 자목1, 자목2, 제8호, 제31호, 제32호, 제66호, 제67호, 제72호, 제73호(이상 소공원 9개소), 화양, 벌터, 가림(이상 어린이공원 3개소), 보훈, 생태, 노송, 오목2, 천천3, 오목3, 오목4, 제93호, 제96호, 제97호, 청명산(이상 근린공원 11개소), 제2호(역사공원 1개소), 해우재, 세류문화, 양카라문화(이상 문화공원 3개소), 황구지천, 서호천, 원천천,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이상 수변공원7개소), 당수(체육공원 1개소)
- 수원시 지방채 발행/계획 공원(총 7개소): 일월, 인계3호, 만석, 통소바위, 숙지, 조원, 영화공원

##### ○ 수원시 생물다양성 보전 취약점

- 계속되는 대규모 개발로 인해 기존 논습지, 녹지 소멸 중
- 현대 도시민의 생활형태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인 동시에 자연환경과의 괴리 유발
- 수원시 1인당 총 도시림 26.6㎡, 생활권 도시림은 4.2㎡로 도시림 기본계획(8.5㎡)의 절반 수준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부터 45개소 공원이 민간개발, 공원해제 등으로 사라질 위기
-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지역이 적고 생물 종 관리 미흡
- 높은 인구밀도, 인구 증가 지속
- 불투수면 지속적으로 증가

#### ■ 제안 내용

##### ○ 기존 공원을 이용한 도심숲 조성

- 수원시의 조성된 공원은 총 249개소로 대부분 생활체육 및 휴식을 위한 공간
- 기존 공원을 이용한 도심숲 조성으로 생태도시로서 수원시의 위상 확보
- 생태자연도 1급 이상 공원 5개소, 2급 이상 30개소 조성
- 도시숲과 도심하천 간 생태적 연결성 확보 필요
- 시민 대상 공원 나무심기 행사 개최로 시민 인식증진

##### ○ 공원일몰제로 사라져가는 공원 살리기

##### ○ 야생생물 보호구역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생태자연도 1급 지정

- 현 야생생물 보호구역 1곳(서둔동256-1,3,5,6번지; 여기서 일대. F-특정조수보호구). 백로 서식지로서 보호구역 설정
- 인근 서호와 서호 주변 논 일대 멸종위기 2급 종인 큰기러기 서식처. 매해 1천 마리 이상 대규모 서식지
- 서호와 인근 논 지역까지 보호구역 설정 필요

- 의왕시 왕송호수 개발이후 경기남부 도심권 유일한 큰기러기 서식지로 남은 실정
- 수원청개구리/반딧불이/뜸부기 서식지, 수달 출몰지 등 체계적 서식 조사와 서식지 유지·보호 필요
- 특히 1급 보호종 서식지, 2급 보호종 2종 이상 서식지는 생태자연도 1급 지정하여 강력한 개발규제 필요

○ **생물다양성을 위한 체계 확보**

- 생물다양성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생태조사 및 로드킬 조사, 관리 필요
- 자연 생태계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 연구, 확보해야
- 녹지·생태축을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행위 지양

○ **환경교육 개발, 지원, 양성 방안 마련**

- 교육청(학교)-지자체-사회환경교육네트워크 간의 협력 사업 지원
- 환경교육의 수요와 지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결 및 상호교류강화
- 초·중·고 학교환경교육 정규수업 방안 마련 및 교육교재 개발
- 환경교육 전문가 대상 환경교육 소규모 연구사업 지원으로 연구역량 증진
- 교육청 환경교육 전담 담당자 제도 운영 의무화
- 주민, 마을단위 참여형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역량강화 및 환경교육실천 자원 발굴

#### ■ 제안 취지

- 국가적으로 '물환경보전법'을 공표, '통합물관리'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수원시 물관리는 업무에 따라 여러 부서, 여러 팀으로 나누어져 있어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함. BOD, SS 등 이·화학적 수질항목 분석 등 수질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음.
- 수원시에는 큰 강은 없고 작은 하천이 여러 줄기 흐르고 있는데, 황구지천을 제외한 하천 대부분은 광교산 줄기의 산맥에서 발원되고 있음. 수원시에는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 등 4개의 주요 하천과 여천, 영화천, 광교천을 포함한 7개의 지방하천과, 24여개의 소하천이 흐르고 있음. 저수지는 신대, 원천, 광 교, 일왕, 서호, 일월, 파장 등 11개의 저수지가 있음.
- 수원천과 서호천은 시중심부를 지나며, 황구지천은 서부를, 원천리천은 동부를 통과하여 시 남단 대항교동에 이르러 합류하여 국가하천 구간인 황구지천 본류가 되어 진위천을 거쳐 안성천에 유입되며, 수원시는 안성 천 중권역의 최상류 지역임.
- 수원시 하천은 지방하천 7개소 57.92km, 개수율은 97.25%이며, 지방하천 지류인 소하천은 24개소 30.73km, 개수율은 80.48%임.
- 초도시화로 도심 불투수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재난과 안전대비가 중시되는 시점에서 물자급률 10.9%로 매우 낮은 수준임.

#### ■ 제안자:

#### ■ 현황 및 문제점

- 물관리 통합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BOD, SS 등 이·화학적 수질항목 분석 등 수질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체계를 수계의 생물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란된 물 환경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물건강성의 회복을 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도록 변화 필요.
-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유량과 수질이 유지되어야 하나, 최소유량 확보가 어려워 팔달상수원의 원수 공급,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유지용수 공급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도시의 친환경 조성 및 도시 물 순환 복원, 그리고 테러나 지진, 홍수, 가뭄 등의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를 위해 지역적 물자립도 향상이 요구됨.

## ■ 제안 내용

### ○ 수원시 통합물관리 체계 추진

- 치수, 이수, 수질 및 수생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물관리 조직 통합, 물관리 공동 추진을 위한 물거버넌스체계 구축(하천, 상수원, 빗물, 기후, 대기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의 민, 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수질중심관리체계가 아닌 생태계 건강성 중심 관리체계로의 변화

### ○ 물의 기능유지, 수생태 보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 하천의 기능,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적정수준의 유량과 수질 유지
- 물순환될수 있는 방안 마련(우수 침투시설 설치,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하수 이용방안, 재이용수 고도처리 등)
- 하천생태보호구역 지정 : 집중적 생태모니터링 실시 및 환경보전을 위한 방법 강구
- 인공습지 조성 등 수생태 개선을 위한 방법 마련

### ○ 물자립도를 높이는 적극적 노력

- 광역상수원에 집중된 현 물공급 시스템을 벗어나, 분산화된 물공급이 필요. 특히 지역 물자립도를 높여 테러, 사고 등 외부요인에 의한 지역의 물 공급 안정성 저해를 막고, 친환경 물 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함
- 수요관리(지역에 맞는 수도요금체계정비, 절수기기보급, 물절약 교육 홍보 등)
- 자체 공급량 확대(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보급 확대,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사시 나오는 지하수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44

환경정책제안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

제안 취지

제안자: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경기도내 고독성물질 노출위험도 1위 수원 영통구.(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위험주민 19만 3천 여 명)
- 수원시 2007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4건.
- 4건 모두 2014년 발생. 유사한 규모의 사고들이 미파악됐을 가능성.
- 2014년 원천리천 삼성우수토구물고기집단폐사사건을 계기로 '수원시 화학사고대응 및 지역 사회 알권리조례' 제정.
- 2017년 12월기준 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신고는 1,798명.
- 이 중 363명 사망(20%), 1,435명 생존(80%). 꾸준히 피해신고 접수중.
- 수원시 거주민 증가에 따라 악취민원 증가. 하절기 악취민원 급증.

○ 문제점 - '옥시아웃' 이후 생활속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후속조치 전무.

- 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했던 수원시가 생활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력 불투명.
- 악취발생 원인을 도로 건조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소각시설 불법소각, 음식물처리업체로 규정. 이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 부족.
-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 증가와 건물 기밀화에 따른 환기부족으로 실내 대기질 악화.
- 이에 따라 수원시는 친환경 자재, 기술, 제고 등 사용할 필요 언급.
- 불필요한 신축과 개. 증축을 사전에 차단하는 규제 필요.

제안 내용

○ 전성분표시제에 발맞춰 **생활속유해화학물질 정보 구축.**

- **노동현장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대응지침 확립.**
- 화학물질통계조사에서 누락되는 사업장 파악 후 조사.
- 영통구 화학사고 대응 및 화학물질 관리 특별관리계획 수립.
- 수원시내 대형유통업체 유해화학물질 판매코너 후순위로 이동.

- 수원시 관내 공공시설, 학교 등 청소제 화학물질 공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의무화.
  - 악취발생이 불가피한 사업장 주변에 차단녹지 조성.
  - 수원시내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지도, 사고대응 매뉴얼 시민들에 고지.
  - 2013년기준 화학물질 배출량 43,081kg. 2022년까지 20,000kg까지 저감.
- 안전하고 건강한 숨. 2022년까지 수원시 연평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25\mu\text{g}$ ,  $10\mu\text{g}$  수준으로 저감!
- 하천의 기능,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적정수준의 유량과 수질 유지
  - 물순환될수 있는 방안 마련(우수 침투시설 설치,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하수 이용방안, 재이용수 고도처리 등)
  - 하천생태보호구역 지정 : 집중적 생태모니터링 실시 및 환경보전을 위한 방법 강구
  - 인공습지 조성 등 수생태 개선을 위한 방법 마련



■ 제안 취지

■ 제안자: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수원시내 미세먼지측정소 총 8개소.(신평, 인계, 영통, 천천, 고색, 금호, 광교동, 동수원사거리)
- 이 중 동수원측정소만 도로변 대기 측정. 이마저도 건물 옥상에 설치.
- 2014년 수원시대기오염 PM10(이하 미세먼지) 추이 내용 확인결과 4월 63 $\mu$ g, 5월 68 $\mu$ g, 6월 44 $\mu$ g 등 신뢰성 부족.
- 수원시 연도별 대기오염 미세먼지 추이내용 확인결과 2005년 61 $\mu$ g에서 2008년부터 54 $\mu$ g, 2009년 54 $\mu$ g 등 하향.
- 수원시 자료는 수도권대기질개선사업으로 2008년부터 감소했다고 설명.
- 수도권 PM2.5(이하 초미세) 배출량 15,733톤.
- 그 중 발전소 4%, 경유차 24%, 비산먼지 30%.
- 2014년~2016년 초미세, 미세먼지 측정망 비교결과 수치가 높은 지역은 14년 미세 동수원, 초미세 광교동. 15년 미세 동수원, 초미세 광교동. 16년 미세 광교동, 초미세 신평동(2위 광교동)

○ 문제점 - '옥시아웃' 이후 생활속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후속조치 전무.

- 대기오염 측정 장치에 대한 신뢰성 부족.
-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계획에 원인해결을 위한 계획이 부족.
- 전기자동차 보급은 미세먼지저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자동차소유가구를 줄이는 효과 기대.
- 수원시의 도로 확충, 개발사업 진행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임.

■ 제안 내용

-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수정, 보완, 실행체계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수원시내 도로다이아트로 도심숲 확장까지 이행.

- 수원시 주간선도로(이하 2010년 기준) 평균 폭원 28M~40M를 25M~35M로 축소.
- 보조간선도로 평균폭 22M~33M를 20~28M로 축소하여 보행도로+자전거도로 확충.
- 수원시 시도 777,750KM를 750,000KM수준으로 축소. 축소한 도로에 녹지 확충.
- 광교산 일대 일체 차량통제.
- 수원시 평시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교통통제, 광역단위 교통통제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 수원시 공공기관, 관련기관 평시 차량2부제 및 경유차 진입금지.
- 취약계층 미세먼지 위험 시기에 KF인증 마스크 지원.

## 46

## 외국인가정 아동 보육비 지원

## ■ 제안 취지

-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국적을 귀화한 외국인 제외)의 수는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2위로 진입하였다. 수원시를 지나는 이동인구 수는 훨씬 더 많다. 그 외국인들은 수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일하며 세금을 내며 생활한다. 외국인은 다양해지고, 그 수도 많아진다. 그 에 맞는 외국인정책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한다.

■ 제안자(또는 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이메일: smwc@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 내에 0세에서 20세 사이에 외국인(다문화,귀화자 제외)의 수는 4,000명정도이다.
- 특히 0세-5세가 2000명정도인데, 외국인부부의 경우 보육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500,000원 정도의 보육비를 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 한다.
- 부모가 아동을 케어할 수 있으나, 외국인부부의 경우에는 둘 다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은 더욱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내에서 한국친구들과 지내면서 교육이 필요하다.
-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가정 아동이 3명 이상 있는 보육기관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의 서비스가 있는데, 지원이 30%밖에 되지 않고, 그 수도 수원시 내에 10개밖에 되지 않아 각 이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려고 하면 가까운 지역에도 없다.

## ■ 제안 내용

- 외국인 부부 가정 자녀의 보육비 지원-안산시 사례를 참고

47

다양한 이주민을 위해 행정구조 개편

- 제안 취지
  -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국적을 귀화한 외국인 제외)의 수는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2위로 진입하였다. 수원시를 지나는 이동인구 수는 훨씬 더 많다. 그 외국인들은 수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일하며 세금을 내며 생활한다. 외국인은 다양해지고, 그 수도 많아진다. 그 에 맞는 외국인정책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한다.
- 제안자(또는 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이메일: smwc@hanmail.net)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는 2017년 12월 31일 통계로는 총 37,852명(귀화자 미포함)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결혼가정이민(F-6) 2,700명(귀화자 미포함)이다. 그 외의 노동자, 유학생, 재중동포 등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원시는 여성가족과 밑에 다문화팀으로 행정구조가 되어있어, 행정구조만으로도 가족으로서의 결합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에 묶여 있는 듯하다. 다양해 지는 외국인주민을 이런 행정구조 속에서 진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제안 내용

- 가장 좋은 것은 외국인을 따로 정책을 추가하지 않아도, 선주민이 받고 있는 정책 안으로 외국인(이주민)과 선주민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받고, 모든 행정에서 외국인(이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나 현재 그것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외국인정책팀(?), 외국인주민팀(?) 따로 두어, 여러 외국인(이주민)의 욕구를 포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

48

외국인도 모든 공공시설 이용

■ 제안 취지

-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국적을 귀화한 외국인 제외)의 수는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2위로 진입하였다. 수원시를 지나는 이동인구 수는 훨씬 더 많다. 그 외국인들은 수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일하며 세금을 내며 생활한다. 외국인은 다양해지고, 그 수도 많아진다. 그 에 맞는 외국인정책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한다.

■ 제안자(또는 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이메일: smwc@hanmail.net)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는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항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있으나 장애인 외국인은 장애인스티커 발급이 안 되어 장애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고, 외국인가정은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하며, 외국인노숙인은 노숙인쉼터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것은 조례와 위반 된다.

■ 제안 내용

- 장애인외국인은 장애인등록이 가능하지 않기 장애주차구역 불가능하다. 조례를 통하여 시 자체적으로 라도 장애인등록이나 지원, 주차스티커 발급이 가능토록 하면 좋겠다.
- 외국인가정도 장난감도서관이나 쉼터 등의 이용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

■ 제안 취지

-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국적을 귀화한 외국인 제외)의 수는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2위로 진입하였다. 수원시를 지나는 이동인구 수는 훨씬 더 많다. 그 외국인들은 수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일하며 세금을 내며 생활한다. 외국인은 다양해지고, 그 수도 많아진다. 그 에 맞는 외국인정책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한다.

■ 제안자(또는 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이메일: smwc@hanmail.net)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6조 지원범위에서 제 1항의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를 기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응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 외국인의 응급수술, 무연 고자의 사망 등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제안 내용

- 실제 조례에 있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적으로 상시 운용이 가능한 기금마련이 필요하다.

50

##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

**■ 제안 취지**

-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국적을 귀화한 외국인 제외)의 수는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2위로 진입하였다. 수원시를 지나는 이동인구 수는 훨씬 더 많다. 그 외국인들은 수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일하며 세금을 내며 생활한다. 외국인은 다양해지고, 그 수도 많아진다. 그 에 맞는 외국인정책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한다.

**■ 제안자(또는 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이메일: smwc@hanmail.net)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대상에서는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합법적인 체류외국인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외국인은 의료, 교육 등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동 법의 제2조 정의의 '외국인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 또는 입양 등으로 혈연관계를 맺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기입되어 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꼭 있어야만 외국인가정이 된다. 외국인부부끼리의 가정은 외국인가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동 법의 제6조 지원범위에서 4가지의 지원 범위와, 그 밖의 사업으로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하여'라는 부분의 내용이 너무 한정적이다.

- 제안 내용**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이를 모든 외국인에게로 확대를 제안한다.
  - 외국인가정은 외국인이 1명이라도 속한 가정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 제6조 기원의 범위 5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를 제외하고, '거주외국인을 위하여'라고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 ■ 제안 취지

-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국적을 귀화한 외국인 제외)의 수는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2위로 진입하였다. 수원시를 지나는 이동인구 수는 훨씬 더 많다. 그 외국인들은 수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일하며 세금을 내며 생활한다. 외국인은 다양해지고, 그 수도 많아진다. 그 에 맞는 외국인정책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한다.

■ 제안자(또는 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이메일: smwc@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F-5는 영주권이라고 해서,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에 5년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비자를 주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지방선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보물이 어려운 단어와 정책용어, 한국어로 되어있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거주외국인의 지원에서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입되어 있으나, 시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 그냥 신청해라라고 하는 것은 시책에 참여하기 어렵다. 번역이나 통역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 ■ 제안 내용

- 외국인 가정에게는 영어와 중국의 선거공보물 번역
- 시의 정책간담회, 참여예산제 등의 시민이 정책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번역이나 통역서비스 지원



52

■ 제안 취지<sup>6)</sup>

- 수원시 지역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자.
- 130여개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필요하다.

■ 제안자(또는 단체): 수원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최은희  
(연락처: 010-3345-1252 이메일: mtwoman@hanmail.net )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시 등록된 130여개의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관리가 필요하다.
- 건축법에 의해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의무화로 시설과 장서가 방치되고 있다.
- 작은도서관진흥법 조례가 있지만, 수원은 공모사업형으로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 **관련근거: 현재 장서지원이나 도서관리프로그램, 운영자 교육 등이 각각 따로 지원해야한다. 다른 지자체들과 다른 지원방법이다. (수원시 작은도서관진흥법 조례 참고)**

■ 제안 내용<sup>7)</sup>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구마련
-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지원
- 마을단위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 필요
- 지역독서공동체의 싹틔줄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장기적 정책마련이 필요

■ 기대 효과

- 지역 독서문화 인구를 확대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이 지역 공동체의 문화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6) 새로운 정책 또는 조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변경 또는 폐기해야 하는 정책 과제  
7) 구체적 목표 또는 평가 가능한 지표도 가능

# 2018 지방선거 정책요구안

;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이라는 핵심 가치의 반영을 위해, 6.13 지방선거 각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과 제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장애인 복지확대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확보를 모색한다.

요 구 안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마을버스, 광역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 2. 트램 도입 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
2.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확대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5개년 계획 수립
3.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1. Day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추가 시간 제공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3.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 지원 체계 도입
4. 성인장애인 평생 교육 보장	1. 중증장애학생 졸업 후 거점 별 직업 훈련 및 연계 기관 확충 2. 특수교육 보조교사 증원 및 장애학생 이동권 확보 3. 장애인권교육 의무화 권한 및 재원 마련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원시지부**  
**수원새벽빛 장애인자립생활센터**